

2021년의 중국 그리고 동북아 질서

2021년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내부 상황과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헝다(Evergrande) 그룹 사태와 알리바바 및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동 부유를 기치로 내건 새로운 중국의 사회정책 등으로 중국 내부의 상황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대미정책이 보다 강경하고 경쟁적인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인 아주대학교의 김홍규 교수를 초청하여 현재 중국의 상황과 대외정책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와 북한문제에 대해 갖는 함의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김홍규 교수의 동의를 얻어 그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일시 및 장소

2021년 9월 16일(목) 오후 1시, 뉴문

사회

이 석(KDI)

토론

김홍규(아주대)



중국의 정세와 현황

이석: 오늘 좌담회에서는 동북아 질서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외교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한다. 첫째, 현재 중국의 정세 및 현황이다. 둘째,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이다. 셋째, 그것이 중국과 한반도 및 북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중갈등의 국면 속에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로 좀더 보았을 때에는 최근 중국의 상황과 대외정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 사슬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한 점이고, 둘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이 단기적 경제회복에서 선방한 것은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경제번영네트워크) 등 경제적 압박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의 기원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호주의 무역갈등 역시 전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의 무연탄 수입이 제약되면서 중국의 전력 생산에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반응이 예상 밖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의 기치하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엄격한 부채 관리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恒大의 파산 시 관련 업체나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에 반하여 중국 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삼성과 같은 외국기업의 철수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군사적 문제에 있어 미국과 대결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영어 추방이나 사교육 금지 등으로 공산당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유연한 또는 유화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우 강경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홍규: 최근 외부에 알려진 중국 공산당 내부 문건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2013년부터 서구의 다원화 및 경제발전에 의해 서구적 가치, 서구적 시장경제 논리가 확대되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중국식의 체제와 발전전략 그리고 대외전략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서구 및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와 사고를 그대로 추종하면 안 되며 중국만의 논리와 비전,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을 정립하였다.

이석: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현황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서구세계의 대립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무엇인가?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김홍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장기전(protracted war)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은 결코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체제를 문제시하였다. 미국의 싱크탱크들 역시 시진핑 주석을 한 국가의 지도자 내지 공화국의 대표자인 President가 아니라 당의 지도자의 의미인 General Secretary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펜스 국무장관 등이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중국 지도부는 미중갈등을 군사적 충돌이 없을 뿐, 사실상 전쟁상태로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이 현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며, 주요 친미 국가들이 미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100년 만에 오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인식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서구에서 다시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겨와 중국 중심의 시대로 이행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미국이 상정하는 현 국제체제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대결하는 이분법적 세계 속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국제체제관은 천하삼분론이다. 미국 중심의 동맹, 중국 중심의 동맹 그리고 서유럽의 EU로 나뉜다. 중국의 기본적 전략은 유럽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며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력방안

들을 모색하여 유럽이 중국에 직접 대항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한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미국의 우호국 중 약한 고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국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견제 및 관리한다.

현 상황을 전쟁상태로 이미 선포한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대단하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구가 장악한 하이테크와 같은 주요 전략자원 분야에서 장기전에 임하고 있다. 중국은 높은 파도에 직접 맞서지 않는다. 미국처럼 직접적 충돌이나 결투를 벌이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마오쩌둥 전 주석의 게릴라전에서와 같이 소규모 전투들을 축적해 나가 적이 완전히 지치고 전의를 상실해 항복하도록 차츰 대세를 장악해 나간다. 점차 적의 진지를 포위해 나간다. 적이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면 나중에 축적된 힘을 가지고 결정적 시기에 공격하여 적을 섬멸시키는 방법을 구사한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지닌 현대인은 시계에 익숙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대립은 시대를 아우르는 싸움이다. 장기전은 무한한 시간대에 속한다. 중국적인 사고에 의하면 기본 100년이 종종 한 단위가 된다. 단기적으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약 30년 정도의 장기전에 임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혹은 앞으로 약 한 세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적이 스스로 지칠 때까지 계속 관찰하고 괴롭히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이 할 일은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 시 세웠던 지침대로이다. 첫째로는 축성, 즉 자기 성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부터 지킨다. 다음 단계로 양곡을 많이 쌓아놓는 것, 즉 자기 힘을 키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이 약점을 보이면 성문을 열고 나가 적을 물리치는 단계이다. 지금의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은 이제 양곡을 저장하는 두 번째 단계의 초기에 진입했다.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시간'에 입각해서 자신의 성을 쌓는다. 그것이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다. 과거에는 밖으로 나가 서구가 제공한 체제와 제도 속에서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제는 적이 전략적 경쟁으로 규정하고 체제와 당을 공격해 오니, 자신의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내수를 탄탄히 하고 자신에 우호적인 세력을 규합하여,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 및 외교안보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중국은 서비스업에 집중된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거의 모두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가 가능한 시장과 기술, 구조가 있고, 이제 그것을 내실화하며, 굳이 서구처럼 경제발전을 수치로 제시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자는 발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같이 살고 협력하자, 즉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갈 것이고 우리의 체제와 국제질서 방식을 인정해 주고, 자신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석: 이러한 정책기조가 일반 중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홍규: 시진핑 주석의 방식이 중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현재의 미중관계를 규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버드대 등 서구 유력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들의 90% 이상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 요인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졸부와 관료들을 응징함으로써 개혁개방 30여 년간 축적되었던 심각한 불평등과 부패를 척결한 데에 있다. 이들로부터 징발한 재화와 기회들을 중앙 당이나 정부가 가져가지 않고 지방과 인민들에게 재분배해 주었다. 중국인들에게 시진핑 주석은 자신들의 체제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지도자이다. 민족주의적 정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능력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우주 개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5G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 등 최첨단의 기술을 이미 구현하고 있다. 미국에 대등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인들의 눈에는 서구가 이러한 성공을 질시하여 중국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기술 자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중국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시스템을 가지고 스스로 완결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도체도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 한다. 기술적 자립의 강조와 민족주의적 기치는 과거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외적으로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했지만, 그 혼란스러웠던 문화대혁명도 10년간 유지되었을 만큼 내부적으로는 안정성이 존재한다. 공산당이 붕괴되거나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의 중앙정부는 경험을 발판 삼아 ‘디지털 레닌리즘’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기술 자립을 통한 중국식의 안정적 발전 전략이 최상의 만족을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공산당 체제의 유지와 통제력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국제질서의 게임체인저(game-changer)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굳이 자신들이 세계를 정복하거나 중국적 시스템으로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체제가 앞으로 100년은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서구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버티면서 그동안 중국이 새로운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면, 하나의 천하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석: 중국의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 미중관계 및 국제질서에 대한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것에 기반을 둔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이와 관련하여 물론 현재에는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으니 서로 파괴적인 행동은 안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차세대 기술에서부터는 중국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서구의 기술과 경제발전 경로에서 이탈하고 세계경제에서 점차 분리될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의 동적 배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생산과 수요를 조달하려 할 것인가? 또는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를 지향하면서 기술 자립을 통한 미국과의 완벽한 탈공조화를 예상하는가?

김홍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도 미중간, 중일간 무역이 증가한 현상에서 보듯이, 저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를 강점으로 여기고, 첨단 전략산업에 접근하는 데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 등 서구에 대한 신뢰는 없다. 즉, 서구가 언제든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장기전의 기저에 있다. 가령 반도체의 경우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과 고금리의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가져오려 할 것이다. 미국의 배제 및 군사적 압박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은 패권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며 우리 방식으로 살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자립을 차기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정책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차세대 산업을 독자적으로 육성하려 할 것이다. 기술 자립은 미국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따라잡기(catch-up)가 아니라 완전한 개량(revolution)으로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소재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과 오랜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나름의 경제 생태계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최첨단 하이테크 경쟁에서 항상 선두에 서거나, 주도하는 것을 굳이 지향하지 않는다. 고도의 전략기술/산업 분야가 아니면 2류의 기술로서 충분히 불편함 없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선택지는 간단하지 않다. 부품별로 미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미국이 단연코 앞서 있지만, 현재로서는 4차 산업의 핵심역량인 배터리 및 전력 네트워크는 장차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중국의 전략과 대외정책

이석: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쿼드(Quad)나 G7을 통해 반(反)중국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시켰다. 유학생 비자 취소 문제,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비타협적이어서, 양국간 대결적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어떻게 보시는가?

김홍규: 처음에는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으로의 기조 전환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반중국 정책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내면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업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파악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후에야 반중국 정책이 구조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중국은 곧 미국의 약점을 간파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어떻게 중국에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채, 미국의 힘을 과신하며 압박을 할 뿐이었다.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파악하였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상당히 오랜 대중국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체계적인 대중국 전략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에 긴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돌발적인 행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기전에 능한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적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양식 체스게임이 아닌 미국식 바둑 두기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전쟁에 직접 돌입하기보다는 중국처럼 포석을 해가며,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을 몰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벌써 약점을 노출시켰다. 미중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대만문제이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과학기술 역량과 외교적 네트워크 그리고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중관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것조차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중국을 대하였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5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관계를 최악으로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선(bottom line)인 대만문제만큼은 보장을 한다는 전략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대중정책의 최저선을 스스로 제시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것이고, 이제 그 위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전략적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미국이 견고한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선, 미국은 과거와 같이 압도적인 힘과 경제력으로 외교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잠재적 위협이 가지고 올 파괴적 영향력에 대한 경고, 민주주의 또는 독재의 양자택일 등 가치적인 측면에서 동맹들과 우방들을 설득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미국의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나 EPN에 미국정부가 투자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반중국 동맹은 자체 경제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중진국 이상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국가들에 한정된다. 유럽의 선진국들 내에서 대중국 인식은 급속히 악화되고는 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 이들 국가는 독자적으로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또한 원하지 않는다. 즉, 유럽은 미국과 동맹하면서도 중국과 협상하고 협력하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럽을 설득할 실탄이 없고 유럽 또한 유럽 나름의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은 천하삼분론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유럽이 단합하여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 결집의 결과물이었다. 문제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의 중간선거 및 대선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까워 미국의 동맹에 대한 지출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히려 중국처럼 미국 내부에서 축성을 할 때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미국정부가 현재의 반중국 전선 정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공화당이 반중에는 동의하겠지만,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의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향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유럽이 미국을 조건 없이 지지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중국이 제안하는 시장 개방 등의 인센티브에 반응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합중연행에서 연행보다 합중이 불리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강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현 바이든 정부는 영국-호주와 함께 Aukus 동맹을 새로이 결성하였다. 미국으로서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기 행정부는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집요한 노력과 이를 장기 전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한반도와 북한문제

이석: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가 한반도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오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구심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중국과는 차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까?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중국 정책기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홍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부문에서 보듯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을 반중 동맹 전선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집요하게 작동하고 한국에 그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는, 금년 말에 완료된다. 2023년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한국의 현재 사드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고도화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에, 사드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차기 정부 2년 차부터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판단하건대 한국이 미국의 이익 담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은 한국과 크게 마찰을 빚을 것이다. 우선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카디즈(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할 것이고, 중국 군함들이 서해 공역을 넘어 올 것이다. 또한 이어도 주변이 국제 분쟁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어도를 장악하면 서해와 대한해협, 동해 그리고 일본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 것이다. 사드 논란 때 중국 내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향후 미국이 대중국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미국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하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국가들에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태도를 전제로 하여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는 한중간 무역관계를 완전히 훼손하지 않은 채, 엔터테인먼트, 관광과 같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야에서 겉보기에 매우 요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기간 기업들을 목표물로 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전자를 선택하였지만, 다음번에는 실질적이고 상당한 타격을 주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타격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부담이지만,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 외교 전략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대비책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 한국이 수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다소 유연해질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운용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영국, 한국, 호주 순이다. 이 중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일본도 위험해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처럼 축성 전략으로 돌아가야 하고,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천하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축이다. 가장 상징적인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을 중국 편으로 돌린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또한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반도체 역량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적으로 돌려 완전히 미국 편으로 편입되게 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한국을 중국 편으로 두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중국은 120여 개 국가에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 다수의 국가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서구의 ‘힘의 외교’와는 달리 중국의 외교에는 ‘명분외교’의 특색이 존재한다. 비록 중국 외교가 최근 공세성을 보여 ‘전랑외교’로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중국은 유교적인 전통의 강조 속에 문화적으로 명분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시진핑 시기 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즉,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이것이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며, 대중국 외교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압도적인 구조적 요인 속에서도 한국이 외교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 안보의 새로운 공간도 동시에 열리고 있다. 한국이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미국과 중국을 설득한다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중은 스스로 대립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할 역량이 부재해 보인다.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핵심축’인 한국에 미소와 협력의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지만, 뒷 손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중 모두 극심한 대립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석: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을 매우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의 대중국 정책기조가 이렇게 일방적인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미중갈등을 염두에 둘 때,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김홍규: 일본의 속내 또한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단호하게 미일동맹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고민은 깊다. 예전 같지 못한 미국이 불안하고, 중국과 협력관계 유지도 필요하다. 실제 2020년 일본이 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졌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가을 쿼드 외상회의에서 대중국 공동합의문에 일본은 제3국을 겨냥한 합의문을 낼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기조에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 ‘안전하고 번영하는(Secure and Prosperous)’을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의 설득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으로 확정하였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필요하다. 한국이 일본과 같이 버텨 주지 않으면 10년 혹은 20년 후에 중국의 영향력 공간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멀티플레이에 능하고, 상당히 정교하고 세련되게 다목적 안배를 하는 게임을 해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일본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

국제정치에서 균형자(balancer)는 자신이 직접적인 갈등이나 분쟁의 축이 되지 않고, 대신 대립하는 두 강대 세력에서 그 축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국가를 지칭한다. 이 균형자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는 국가인데, 한동안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해왔던 것은 영국이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의 판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가장 가깝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국 역시 거의 준(準)균형자로서 전략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너무 균형자적 위치를 강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안보적 역량이 중요해졌다.

이석: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북중관계 및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재의 북중관계가 정말 밀착되어 있는 것인가? 중국이 기대하는 북한의 행동은 무엇인가?

김홍규: 일단 북중관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좋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중국은 자신의 이익 증진과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활용할 대상일 뿐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명을 같이 할 동맹 혹은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북중동맹을 주장하지 않고 자력갱생 정책을 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북한에 최대의 위협은 미국이라기보다 중국이다. 미국이 현시점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욱 거칠고 역량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북한도 알고 있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보복이 훨씬 더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섯 번씩이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중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훨씬 더 격화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를 초월해 지원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북한은 세 가지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첫째, 자력갱생이다. 둘째,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스스로를 지켜낼 역량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방을 확보하고 자체 안보의 방파제로 삼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북한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기술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내정 개입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와 독립을 유지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핵은 중국의 과도한 내정간섭이나 개입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지정학적으로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 북한은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군수 지원이 그중 하나이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다. 만일의 경우 중국이 모든 비난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전쟁에서의 악몽도 여전히 강하다. 남은 것은 경제적 레버리지이다.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북한의 지원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았고, 내년 2월에는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가을에는 제20차 당대회가 열려 새로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한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런 시점에서 도발 등으로 미국에 군비 확장과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눈높이를 같이 한다’고 호응하며, 중국의 이해를 존중하는 대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간 신뢰가 약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북한은 중국에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지금 중국은 전략적 이해와 우려를 담고 견제와 관여 정책으로 한반도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가까워지려다 한국과 멀어지는 결과를 원하지 않기에 한국과 북한 모두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 속에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석: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종종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귀중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었다. 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북한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특히 요즘 변화의 핵심 당사자가 중국이고,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중국의 변화와 행보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